

# 文 “정계 은퇴 광주 발언, 당 총선 전략”

<문재인>

## “호남 민심 지지 없다면 대선 포기 지금도 유효”

### 국회 기자간담회…“야 대표 대권후보로 정권교체 하고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대표는 15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광주를 찾아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은퇴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으로 했던 발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지난 번 광주 발언은 당시 선거에서 광주와 호남에서 당이 지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으로 했던 것”이라며 “또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고, 그것을 통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그것이 만약 광주 시민들

이나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시 발언의 맥락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는 “광주와 호남 민심의 지지가 없다면 제가 대선도 포기할 것이고, 정치도 그만둘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교체를 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광주와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며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래서 광주와 호남 민심

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면서 “그리고 그때 했던 저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을 친 광주 발언이 ‘전략적 판단’에 근거했다는 문 전 대표의 설명은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당장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표가 당시 정계 은퇴 발언이 민주당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호남 민심을 모욕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지난 총선에서의 ‘정계 은퇴’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이 광주에서 보다 진솔하게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또, 문 전 대표가 당시 발언이 유효하다

고 다시 강조했다. 점에서 호남의 지지척도가 명료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 최소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호남 민심의 지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3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추후 대선 과정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 여부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추미에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을 둘러싼 사전 교감설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문 대표는 모든 대권주자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저와 논의한다면 다른 분들과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與 “文, 지금 대통령 다된 줄 착각”

### “대통령 퇴진 추진은 대선 운동…눈치만 보는 무원칙 행보”

새누리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데 대해 “유불리만 계산하다가 퇴진운동을 내세워 사실상 대선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성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가장 먼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이를 뒤집는 등 문 전 대표의 갑자기 행보를 눈치만 보는 무원칙한 행태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추미에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 사건을 보호하고 무마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내놨다는 인상을 강하게”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문 전 대표가 무제대로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에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건너차 버리고, 나라의 혼란만 부추겨 대한민국을 아노미 상태로 빠트릴 작정이냐”면서 “지금 대통령이 다된 줄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뒤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서는 친인척, 측근 비리가 사라질까요?”라고 반문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은 가족에게 건네진 500만 달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문 전 대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만 촛불은 작금의 국정 위기를 질서 있게 수습하고, 헌법 개정을 포함한 국가개조,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靑 “영수회담 철회 유감…언제든 기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가 전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추 대표의 제안으로 국정 정상화와 정국안정을 위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어쨌든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 열릴지 기대한다”며 “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

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영수회담 무산 이후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박 대통령이 속고하고 계시니까 지켜봐달라”며 “정국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및 방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 일시와 관련해 “날짜를 말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할 테니까 제가 말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세갈래 새누리…출구 없는 내홍

### 2개 지도부에 비상시국위 가세 “지지 없는 대선주자들 당 먹칠” 이정현, 남경필 등에 사퇴 촉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親박근계)계 지도부 사퇴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15일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12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비박(비박근계)계와 친박계의 ‘한지붕 두 살림’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도부에는 두 의원 외에 남경필·원희룡·김문수·정병국·나경원·주호영·오세훈·심재철·김재경·강석호 등 4선(選) 이상 전현직 의원 및 시도지사로 구성됐다. 비상시국위는 이 ‘대표자 회의’ 외에 조만간 조·재선 의원이 중심이 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 지도부는 과도 회의제 형식으로 당 혁신 방안을 내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비상시국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위원장 없는 대표자회의 형식으로 운영되며 친박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까지 당 해체를 포함한 혁신의 길을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의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대책 회의 외에 비상시국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지도부를 갖게 됐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내 3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한 간담회를 소집했으나 참석 대상 24명의 의원 중 안상수 의원 단 한명만 참석한 것으로



버티는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대표회의실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면담한 뒤 심정우 광주광산을 당협위원장(왼쪽)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알려졌다.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까지 이 대표를 외면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선언한 마당에 이 대표 주재 행사에 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파열음에 거세지자 이 대표는 여권 잠재 대선주자로 불리는 남경필 경

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새누리당 대선주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과의 면담과 잇따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선주자는 우리당의 명예이자 자존심인데 네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도 10%가 안 된다”며 “자기 앞

가림도 못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네 사람을 한 명씩 거명하며 “여론조사 지지율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새누리당 대권주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며 “그렇게 도정에 할 일이 없고, 경험과 경륜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느냐.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3당 국방장관 해임안 30일 제출기로

### 광주·전남 시민단체 “한·일 군사보호협정 가서명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김종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달 말 제출하고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앞서 야 3당은 한일 양측이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가서명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으로 하기에는 여러 법적 요건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하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5일 논평을 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정 체결 강행의 총대를 맨 한 장관에 대해 국회는 해임 또는 탄핵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